

는 것이 타당함.

셋째, 유사사업인 여성부의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해설집¹⁵¹⁾ 발간(1천만원)보다 10배가 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발간(1억1백만원)은 조문 수의 차이(국가인권위원회법 63개 조문,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39개 조문), 남녀차별의 단일영역이라는 업무영역상의 차이 등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과다 계상이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많다고 보여짐.

그 세부 산출내역을 비교하여 보면, 단가 등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원고료 1매당 10,000원은 여성부의 3,500원에 비해 지나치게 높으며, 원고료지급 원고매수도 5,000매로 하고 있으나 예정 인쇄면수(450면) 대비 과다 산정되어 있음(통상 인쇄매수의 4배를 원고매수로 산정하므로 450면*4=1,800매가 적정). 그 밖에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해설집 발간 예산에는 없는 각종 명목의 비용이 계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억여원을 들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한 조문별 해설집을 발간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나 추진방법상 적절치 않은 측면이 많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설집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만들거나, 아니면 2~3천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완성품을 납품받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음.

15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김일립 해설, 총 258면, 2003.1 발간

라. 인권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이 사업은 인권법령의 제·개정안에 대한 사전협의 및 인권법령 개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관부처의 입법반영 지원을 위한 시스템 및 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사업 첫 해인 '04년도 5,400만원에 이어 '05년도 예산안에도 3,9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인권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예산	2005예산안	증 감	
계	54	39	△15	△27.8
○ 협의체 회의 운영	37	25	△12	△32.4
○ 기초자료 축적	17	14	△3	△17.6

이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법령에 대한 검토협의 등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려고 하였지만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협의회 개최도 없었으며 187개의 인권관련 법령에 대하여 22개 부처에 의견요청한 경우도 일부회신을 포함 11개 부처만이 회신¹⁵²⁾해 오는 등 타 부처의 비협조로 협의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업의 추진은 사실상 지지부진한 실정에 있음. 협의체 회의운영 예산액이 '05년도 예산안에서는 전년 대비 32.4% 삭감되어 있음은 이와 같은 실정을 반영한 결과라고 하겠음. 사실 수많은 인권관련 법령의 제·개정안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협

152) 2004. 9 현재

의를 위한 회의운영을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제1호에 따라 인권에 관한 법령을 조사·연구검토하여 개선의견이나 권고사항을 통보하는 방법이 바람직하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보다 제도화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사업의 예산이 신규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협의체 회의운영”을 위한 예산 2,500만원은 삭감하여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마. 인권정책 관계자협의회 운영사업(신규)

이 사업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제2항,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1조 및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규칙¹⁵³⁾에 따라 구성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¹⁵⁴⁾ 운영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는 주요기능은 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작성, 위원회 권고의 실효성 제고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인권에 관한 정보의 교환과 공유 및 기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임. 구성현황을 보면, '04년도 10월현재 8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05년도에 관계기관 등과의 효율적 협의체제 구축을 위하여 신규편성된 예산은 모두 6,100만원임.

153)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운영규칙

154) 의장 1인(인권위 사무총장), 지명위원 64인(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국장급이상 공무원), 위촉위원 17인(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인권위원회장이 위촉)

<세 부 예 산 내 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내 역	
일반수용비 (201-01)	협의체 자료인쇄비(전체 및 분과)	15,071
	외부초청인사 사례금	9,450
	기타운영경비	1,350
운영수당 (201-06)	회의참석수당	16,000
국내여비 (202-01)	정책협의체 참석자 여비	13,334
업무추진비 (204-01)	업무협의 및 회의운영경비	5,400
합 계		61,105

이 사업은 앞에서 언급한 인권법령정비시스템 구축사업과 비교해 볼 때 인권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유사한 목적과 내용을 가지고 있음. 다만, 그 사업범위가 법령정비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고 인권정책 전반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앞으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는 운영성과를 지켜 보고 판단하여야 하겠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04년도에 처음 시행된 인권법령 정비시스템 구축사업이 시행과정에서 각 부처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협의체 구축이 유명무실하게 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무엇보다도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게 협의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협의체

의 구성인원이 의장포함 82명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처럼 많은 수의 위원들이 모여 과연 안전을 효율적으로 다루면서 당초 기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있으므로 그 운영방법 등에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임.

바. 인권용어사전 제작을 위한 사업(신규)

이는 인권관련 용어를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개념을 정립한 인권용어사전을 발간함으로써 인권분야 어휘집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05년도를 시작으로 '07년도까지 총 3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음. 사업 첫째인 '05년도에는 신규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예산의 세부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음(세출예산안명세서 87~88쪽 참조).

<세 부 산 출 내 역>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내 역	
일반수용비 (201-01)	○ 원고료 (10,000원*400매*10명)	40,000
	○ 외국용어번역판 등 인쇄 (8,120원+91원*10)*200면*4회	7,224
	○ 번역료 200자*1,000매*40원*4종	32,000
업무추진비 (204-01)	○ 전문가회의 운영 (5,000원*25명*10회)	1,250
용역비 (206-01)	○ 인권관련어집 연구용역 70,000,000원*1식	70,000
합 계		150,474

<연 차 별 추 진 계 획>

- '05년도 : 사전 수록내용 및 범위설정, 외국자료번역, 인권관련어집개발
- '06년도 : 카테고리별 대표용어 선정, 용어정의 초안을 마련하고
- '07년도 : 인권용어 개념정의, 전문가 감수, 사전발간

이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음.

첫째, 인권용어사전 제작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는데 인권용어라는 것이 특수성이 없진 않겠지만 대부분 헌법이나 형사법의 법률용어와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됨. 인권용어사전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인권법과 관련한 수많은 국내의 자료, 해설서 등이 존재하고, 이미 외국(일본이나 미국, 유럽 등)에서 발간된 인권용어사전이 다양하게 존재할 것이므로¹⁵⁵⁾ 국제화되어 있는 인권특유의 용어에 대해서는 새로운 연구없이 이를 번역해서 활용되고, 필요시 약간의 수정·보완을 거치면 될 것임. 또한, 우리 헌법과 형사법상 용어 등에 대해서는 기왕에 확립되어 있는 용어정의를 활용하면 손쉽게 인권용어사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함.

둘째, 인권용어사전을 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예산을 절감하며 발간할 필요가 있음.

155) 예컨대, David Robertson, "A dictionary of human rights", London, Europa Publication, 1997

그러나 인권용어사전을 발간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세부 산출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부전문가들에게 수천만원을 지급하면서 원고를 의뢰하거나 인권관련어집 연구용역을 주고, 별도로 외국자료 번역료를 계상하는 등 사업추진이 비효율적임. 연차별 추진계획 역시 사전발간을 위한 용어선정, 원고작성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될 것으로 보는데 먼저, 인권관련어집을 개발하고, 용어정의 초안을 마련하며, 다시 용어정의를 확정하여 사전을 마련하는 복잡한 다단계 절차를 제시하면서 각 연도별로 1억원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음. 그러므로, 이 사업은 위와 같이 복잡·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인권용어사전” 발간사업 전체를 외부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어 수행하게 하고, 그 완성품을 납품받는 것이 행정력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함. 이렇게 추진하는 경우, 예산안에 계상된 외국문헌번역, 인권관련어집개발, 전문가 자문, 회의비 등의 예산이 용역비에 포함되게 되어 별도로 계상할 필요가 없을 것임.

셋째, 참고로 기왕에 발간된 한국법제연구원의 인권용어해설집(2004. 9. 강현철 부연구위원, 이주일 세명대 법학과교수)의 경우에는 원고료, 인쇄비 등을 합하여 그 발간비용이 약 2,000만원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한국법제연구원이 발간한 인권용어해설집의 내용을 보면, 헌법, 형사법 및 행정법 등 주로 법령에서 정의되는 인권관련 법령용어를 중심으로 약

400여 인권용어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의 핵심요지와 함께 상세히 해설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용어사전에 수록할 인권용어의 범주는 법령분야, 인권기구 분야, 절차 분야, 이론 분야 등으로 대단히 광범위하고, 전문적 분야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한국법제연구원의 실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권용어사전의 경우에 있어서도 거의 대부분 인권관련 법령상의 용어를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사. 시민실천 프로그램운영 사업의 시민단체 지원사업(민간경상보조)
으로의 통합 필요성

시민실천 프로그램운영은 대국민 인권의식 신장 및 확산을 목적으로 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민단체에 총 1억 2,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임.(아래 도표 참조) 인권관련 시민단체 지원은 공모를 통해 인권관련 시민단체 추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05년도 예산안은 총 1억 5,000만원 임.(아래 도표 참조)

'03년도 결산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단체의 시민실천 프로그램 개발사업의 경우, 형식상 예산편성 과목은 연구개발용역비(예산 과목 206-01)로 되어 있으나 내용적으로 보면 연구개발용역비라기 보다는 보조금 지원사업의 성격이 짙어 인권관련 시민단체 지원사업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았음. 이는 결국 동일 성격의 사업을 사실상 분산하여 중복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시민실천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이에 대한 운영과정을 현장 출장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심사 및 평가하기 위한 행정력 및 각종 부대경비¹⁵⁶⁾가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인권관련 시민단체 지원사업의 경우도 심사 및 평가 사례금(300만원) 등 부대경비 및 행정력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따라서, 양자를 통합·운영함으로써 공모·심사·평

156) 총 부대경비(1,920만원) : 자료인쇄 및 심사수당(1,400만원), 운영수당(280만원), 여비(140만원), 업무추진비(100만원), 세출예산(안)명세서 103~104쪽 참조

가 등을 별도로 행하는 데 따르는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줄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힐 필요가 있음.

2004년도 인권시민단체 지원사업 및 단체현황

(단위 : 천원)

연월	사업명	단체명	지원금액
1	데이터베이스 정보인권 지침 개발 및 출판	진보네트워크	7,000
2	2004 청소년 모의법정 대본 공모 및 공연사업	광주인권운동센터 등	7,000
3	국내 외국인 난민 인권실태조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5,000
4	성적 소수자 전문 상담센터 기초작업	동성애자인권연대	5,000
5	환자권리 확보를 위한 차별실태 조사 및 제도개선 활동	건강세상네트워크	7,000
6	시민과 함께하는 장애인 이동권보장법률 법률 입법을 위한 캠페인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6,000
7	수화로 쉬운 인권비디오 보급	(사)한국농아인협회	7,000
8	실업자 노동인권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과 조직화방안 모색	서울여성노동조합	7,000
9	공유 라이선스 및 운동모델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통한 정보공유의 권리보장	정보공유연대 IPLeft	4,000
10	군인의 전화	군경의문사건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6,000
11	"장애야 놀자" - 대구시 거주 초중고등학교 장애인교육프로그램	장애인지역공동체	6,700
12	무학·지학력 성인학습자와 노인 인권교육	가톨릭여성회관	4,000
13	아동인권관련 생활환경 및 제도개선 활동"인권 지킴이"	안산YMCA 아동인권센터	6,000
14	환경관련 인권침해 해외소송사례 연구	환경정의시민연대	5,000
15	원폭피해자 구술 증언기록 사업	한국청년연합회 대구본부	5,000
16	ILO 총회 참가 및 독일 주요도시 순회세미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6,200
17	해외 한국기업 노동자 인권 워크숍-인도네시아, 필리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7,000
18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전략	천주교인권위원회	6,300
19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공개 공청회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5,000
20	북한인권 국내외 연대활동	(사)좋은벗들	4,000
21	종교인권단체 네트워크 개발사업 및 종교인 인권아카데미	원불교인권위원회	5,000
22	아동보호 국제기준의 국내적용을 위한 연구조사를 통한 기준수립과 기준실현을 위한 홍보캠페인	(사)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7,000
23	인권상담 "365 인권 Hot-Line"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6,000
24	부산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구축	부산인권센터	6,000
25	인권학술심포지움-인권운동의 과제와 전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5,000
26	미군범죄 피해자 인권보호 사업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4,800
합 계			150,000

2004년도 시민실천프로그램개발 사업 현황

번호	사업명	단체명	사업비
1	장애인 시험차별 철폐를 위한 장애우 시험차별 개선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1,000
2	HIV/AIDS 인권지침서 발간작업 및 배포 HIV/AIDS 관련 대국민 홍보 및 주간사업 및 열린토론회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10,000
3	여성장애인 차별없는 평등세상 만들기	한국여성장애인연합	8,000
4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정보접근권 차별해소를 위한 시민행동	목포경찰련	10,000
5	신문에서 나타난 소의계층 보도사진 모니터	민연련	6,000
6	이주노동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만드는 다문화사회	부산의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9,000
7	북한이탈주민 자녀 통합교육 프로그램개발 "상대를 존중하면, 교실이 넓어져요!"	남북어린이어깨동무	5,000
8	차별을 넘어 평등한 관계 맺기 "부부재산은 공동의 것"	한국여성의 전화	8,000
9	이주노동자 차별방지를 위한 고충주 인권교육	아시아의 친구들	6,000
10	저소득 실업장애인 인권확보를 위한 cyber캠페인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8,000
11	청소년의 평등노동권에 대한 의식향상과 청소년 노동 차별관행 개선을 위한 창구개설 및 운영	대전여민회	9,000
12	장애·비장애 통합 놀이터 매뉴얼 개발 및 통합 놀이터 만들기 조례제정 운동	장애인편의시설추진시민연대	8,000
13	청소년인권 한울 만들기 운동	군산YMCA	7,000
14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의식 해소를 위한 초중학생 문화교육 및 행동 프로그램 개발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모임	7,000
15	장애우와 함께하는 인권이야기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6,000
16	다름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부산여성성적소수자 인권센터	7,000
합 계			125,000

아. 차별예방 및 인권문화제

이는 크게 인권침해·차별행위 예방을 위한 인권문화 콘텐츠 개발과 인권의 날 행사를 비롯한 인권문화제로 대별되는 사업으로 '04년도 9억 400만원보다 2.4% 증액된 9억 2,600만원이 계상되었음.

<세부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예산	2005예산안	증 감	
계	904	926	22	2.4
○인권문화콘텐츠 개발	766	766	-	-
○인권문화제(인권의 날 행사 등)	138	160	22	15.9

먼저 인권문화 콘텐츠개발은 7억 6,600만원으로 영화제작 5억 7,800만원,157) 인권사진집 1억 500만원, 인권만화집 8,3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음.

이 사업의 목적은 인권침해·차별행위 예방을 위한 문화적 인프라 구축으로 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다소 의문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문화콘텐츠 개발158)은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르는 시장영역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함.

157) 부패방지위원회의 부패방지 영화(다큐멘터리 형식)의 예산총액(제작비, 비디오·CD제작 및 배포 비용 포함)은 1억 600만원임.

158) 일반적으로 문화관광부가 소관하는 문화콘텐츠의 개발은 시장성을 전제로 많은 노력과 비용 투입의 결과, 작품화되고 상품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인권침해·차별과 관련되는 내용물도 영화·연극·문학속에 수없이 존재하고 있는 것임.

특히, 2003년 12월 발행(1쇄 3,000부)한 인권사진집인 <눈·밖에·나다>의 경우 그 내용을 보면 외국인 노동자의 작업모습, 개인 및 가족사진 등을 포함한 이들 사진 대부분은 우리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것들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일반서점에서 판매하도록 하고 있는데 과연 이를 구입하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사진집을 1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제작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임.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관지인 "인권"지에 인권관련 사진을 연재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음.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은 이러한 문화콘텐츠 영역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보다는 교육홍보물 또는 교육교재 등을 제작·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다음 인권문화제는 세계인권선언일(12.10)에 즈음하여 인권의 날 기념행사, 인권관련 영화시사회, 인권사진전 등을 개최함으로써 인권의식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임.

세계인권선언일에 즈음하여 법무부에서도 세계인권선언 기념 주간 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 바, 이 사업과 관련한 법무부의 '05년도 예산안은 총 500만원159)을 계상하고 있는데 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159) 세계인권선언기념 주간 행사 300만원과 인권홍보 심포지엄 200만원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념품 제작·배포, 사진전시회, 1일의 기념식을 위한 벽화 제작, 각종 공연 등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의 날 기념행사를 비롯한 인권문화제는 지나치게 전시성 행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지 않도록 간소하면서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래 두 기관의 '03년도 집행내역 참조)

<200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문화제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인권의날 기념행사	63	장소대관, 진행 및 공연 사례금, 상패, 시상금, 기념식 벽화제작, 초청장 등, 촬영료, 기념품, 다과, 행사용품 및 기타
인권영화 시사회	31	대관료, 다과
인권사진전	25	대관료, 홍보물, 사진프린트 및 액자제작
계	119	

<2003년도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주간 행사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인권옹호 심포지엄	3	정부청사 활용
인권영화 시사회	소요경비 없음	정부청사 활용
수사와 인권 토론회	소요경비 없음	프레스 센터
열린 음악회	소요경비 없음,	KBS

- 연합통신 전용프린터 설치로 수신료를 증액하였는데 이는 대법원의 견해
- 소송구조 집행실적이 저조한데, '05년도 예산에 증액한 이유
- 화상 영상실질심사제도는 시대에 부합해 보이나, 현행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단순한 시범실시 수준인지
- 시민사법모니터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예산반영 여부
- 전산직을 감원하고 용역비를 증액했는데 예산상 오히려 전산직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 공탁금의 적극적인 반환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법원청사신축 예산의 사고이월비율이 너무 높는데 이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는지
- 국선변호료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 호주제 폐지와 관련하여 기존의 호적전산화사업은 어떻게 활용되는지, 또 이와 관련한 추가예산규모
- 언론기관 심포지엄 개최비용으로 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바, 법원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6. 국가인권위원회소관

- 해설집 발간의 필요성 및 과다계상 여부

- 해설집, 용어집 예산을 조정하여 인권사각지대 순회상담 예산 증액 필요
- 인권용어사전 제작이 꼭 필요한가
- 인권용어사전 제작이 법제연구원의 인권용어사전과 무엇이 다른가?
- 인권법령에 대한 검토협의 등을 위한 협의체는 그 운영이 잘 안되는 것 아닌가
- 각 부처에 인권관련 법령에 대한 의견요청을 하여도 협조가 잘 안되고 있지 않나
- 대도시 위주의 순회상담 활동보다 중소도시나 광산, 기지촌 등 인권사각지대 위주로 전환할 필요성
- 인권순회 상담 예산의 증액 필요
- 순회상담용 전용버스를 활용한다면 소외지역을 구석구석 돌며 상담가능하지 않은가
- 시민실천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사실상 인권관련 시민단체 지원사업과 차이가 없는 분산 중복된 것 아닌가
- 인권정책 관계자협의회 구성인원이 82명이라면 안전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될 수 있는가
- 인권정책 관계자협의회 운영을 인권법령정비시스템 구축사업의 협의체 운영과 통합 조정할 용의는
- 인권문화콘텐츠 개발 사업(영화, 사진집, 만화)의 실효성 여부

- 인권문화콘텐츠 개발 사업은 시장성을 전제로 하기 보다 다큐멘터리 수준의 홍보물 등을 제작한다면 예산이 크게 절감되지 않나
-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사무소 설치 필요성 여부
- 인권상담업무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상담원의 정규직화는 꼭 필요한 것 아닌가

7. 부패방지위원회

- 지역 시민단체의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 경상보조금 예산 지원이 필요한가
- 시민실천 연구용역 사업이 기본사업비인 부패방지 연구용역 사업과 중복 편성한 것 아닌가
- 시민단체 간행물, 지역신문 광고는 비용 대비 효과성이 낮으므로 인터넷포털 사이트 등으로 통합 필요
- 부패방지법이 개정('04.11.9 개정안 제출)되면 지급기준이 완화되어 지급액이 크게 증가될 것인데 증액이 필요하지 않은가
- 신고보상 사업 활성화 계획은
-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열람용의는
- 조사권이 없는데 특수활동비를 편성 사용하는 이유
- 해외출장이 매년 동일 지역, 동일 목적으로 반복되지 않게 하고 결과보고서를 공유 활용토록 함으로써 예산 절감 필요

VI.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예산안심사소위원장 이은영 위원)

1. 법무부 소관

- 공안수사비는 22억 7,7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 대비 1억 3,200만원이 이미 감액편성되고 있으나, 2003년도 전용계원(3억 4,000만원)의 범위 안에서 예산을 감액운용하기로 하여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는 대신에, 전년도에 비하여 감액편성된 마약수사비를 1억 5,000만원 증액·조정함으로써 마약수사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음.
- 교정공무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각급 교정시설과 각급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교정직 공무원 및 소년보호직 공무원에 대하여 특정업무경비로 매월 20만원씩 교정교화활동비 또는 소년보호활동비를 신규로 지급하기로 하여 소요예산 313억 4,0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음.

2. 법제처 소관

- 연합통신 수신료 7,8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에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에 훈령·예규의 적법성 확보 관련 부문을 추가하기로 하고 관련 경비 1,200만원을 증액하였음. 아울러 여론조사 모니

5. 대법원 소관

- 국선번호료 예산은 현재 국선번호료 기본단가인 15만원으로는 내실 있는 국선번호가 될 수 없다고 보아, 헌법재판소의 국선대리인 보수 기본단가를 고려하여 이를 25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이에 소요되는 73억 9,349만원을 증액하였음.
- 예비금 23억 6,070만 5,000원 중 매년 동일한 경상적 경비로 사용되는 금액 21억원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하고, 나머지 2억 6,070만 5,000원은 예비금으로 존속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일반예산으로의 계상내역은 재판활동지원비와 상고심지원비로 18억원, 업무추진비로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음.

6.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발간비 중 원고료 5,000만원의 30%에 해당하는 1,500만원을 삭감하고, 인권용어사전 제작은 향후 추진하기로 하여 소요예산 1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인권순회상담사업비에 전용버스 구입비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음.
- 지방사무소 설치에 소요되는 인건비 2억 3,800만원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두기로 하였으나, 계류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유선호의원 발의)에서 지방사무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에도 법률안을 의결하기 전에 지방사무소 설치를 전제로 인건

비 예산부터 계상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

7. 부패방지위원회 소관

- 지역단위 부패방지 활성화사업 중 민간경상보조 2억원 전액을 삭감하고, 기본사업비 중 연구개발비 5,000만원, 부패방지법령의 개정 후 보상금 지급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고자 보상금 1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음.

- 기관운영 감사활동경비 중 국내여비 27억원 삭감
- 기관운영 감사활동경비 중 특정업무경비 27억원 증액

4. 헌법재판소소관

가. 일반회계 세입·세출 : 수정의결 [별표4 참조]

- 베니스위원회분담금 5,880만원 삭감
- 예비금 5억 964만원중 4억8,464만원을 기본경비로 이전하고 2,500만원만 존속

5. 대법원소관

가. 일반회계 세입·세출 : 수정의결 [별표5 참조]

- 국선번호료 73억9,349만원 증액
- 예비금 23억6,070만원중 21억은 기본경비로 이전하고 2억6,070만원 존속

나. 등기특별회계 세입·세출 : 원안의결

다. 국유재산특별회계 세입·세출 : 원안의결

6. 국가인권위원회소관

가. 일반회계 세출 : 수정 의결 [별표6 참조]

-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발간 1,500만원 삭감
- 인권용어사전제작 : 1억5,000만원 삭감
- 인권순회 상담 : 1억원 증액

7. 부패방지위원회소관

가. 일반회계 세출 : 수정의결[별표7 참조]

- 민간경상보조 2억원 삭감
- 연구개발비 5,000만원 증액
- 신고자보상 1억원 증액

VIII. 소수의견의 요지

1.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계류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유선호의원 발의)에서 지방사무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에도 법률안을 의결하기 전에 지방사무소 설치를 전제로 인건비 예산부터 계상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움.

2. 감사원 소관

감사운영혁신사업비의 경우 기본사업비 또는 다른 주요사업비 예산과 중복·분산 편성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의 일부 삭감이 필요함.

IX. 기타 필요한 사항(부대의견)

1. 법무부

먼저, 국가정보원이 집행상황을 감독하는 일부 특수활동비 예산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하도록 하고, 2005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예산을 활용하여 재소자 건강검진을 위한 순회버스 및 관련 의료장비를 구입하도록 하며, 그 소요인력을 확보하여 재소자의 건강검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함.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2004.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9. 국가인권위원회

가. 일반회계

<세 출>

(1) 인권의식 홍보 강화(1101-212)

□ 동 사업은 TV등 대중매체광고와 취약 지역에 대한 진정권 안내 및 리플렛 등을 제작·배포함으로써 인권위원회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05년 예산안은 '04년과 동일한 3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역을 보면 진정안내 TV광고에 2억9,900만원과 진정홍보를 위한 리플렛 제작 등에 5,800만원으로 되어있음.

□ 동 사업의 집행실적을 보면, '03년의 경우 신설부서인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및 기능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목적으로 세계인권선언기념일(12월 10일)에 맞추어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3일간 KBS, MBC, SBS 등에 총 240회 방송(SA급, A급, B급 등 혼용)을 하였음.

동 사업 추진을 위해 당초 예산액 3억5,700만원이 부족하여 사업간 조정을 통해 인권의식향상 매체 발간비에서 2억원을 추가로 배정받아 총 5억5,300만원을 집행하였음.

□ '04년의 경우는 총 예산 3억5,700만원 중 9월말 현재 리플렛 제작 등을 위해 2,800만원을 집행하였을 뿐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함. 동위원회는 집행부진 사유에 대해 TV광고 미 실시에 의한 것으로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전후하여 12월경 KBS, MBC, SBS등에 80여회 방송을 계획하고 있으

므로,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 동 사업과 관련하여 검토할 사항은

첫째, 국민들에게 인권홍보를 위한 TV광고는 동 위원회의 출범 초에 한 두 해는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나, 정부부처인 동 위원회가 세계인권선언일에 맞추어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대대적인 TV광고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가 있으며,

둘째, 동 사업과 별도로 인권관련 정보 및 주요현안을 홍보하기 위한 매체발간 및 웹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인권의식향상 매체발간비가 '05년 예산에 4억5,500만원이 계상되어있어, TV광고가 아니더라도 국민들에게 인권홍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TV광고를 통한 대국민 인권홍보는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인권 상황 실태조사(1111-212)

□ 동 사업은 인권 영역의 기초 실태조사를 통한 인권 상황판단의 기초 자료 확보 및 법령·제도·정책·관행 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05년 예산안은 '04년과 동일한 7억2,400만원이 계상되었음.

□ 동 사업은 모두 외부용역에 의한 연구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05년의 경우 18개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 2005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예정) >

해당연도	분야	2005
구분		과제명
정책연구 (2)		생명윤리 의식조사 및 가이드라인 개발연구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상 지위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
기반연구 (9)	자유권	다수인보호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유형 및 지침개발연구
		사법절차 상 인권침해실태조사
	평등권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실태 및 이동권 보장현황 실태조사
		취업과정에서의 학력차별현황 실태조사
		공공부문 고용차별 유형 및 판단기준 지침개발 연구
	사회권	차상위계층 미학령기 아동의 보육현황 실태조사
		가출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노인의 기초생활보장현황 인권실태조사
		주거권보장을 위한 재개발사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인권원안 (6)	부서 필요	산업기능요원 인권실태조사
		전투경찰 제도개선 및 인권실태조사
		인권실태조사 체계화를 위한 조사방법론 개발연구
		시민의 인권신장을 위한 '모범적 공치' 실태조사
		사회권 관련 관례분석 연구조사
		고용허가제 이후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조사
인권의식 (1)		외국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동 사업의 집행실적을 보면 사고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 최근 3년간 사업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연 도	예산총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02	750	645	105	-
'03	840	538	396	11
'04. 9월말 기준	724	399		-

□ 그 주된 이유는 연구용역계약이 대부분 하반기에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연구용역과제 중 연구수행 적격자가 없어 사업추진이 지연된데 기인함. '02년의 경우 29개 중 5개 과제가 '03년의 경우 23개 과제 중 13개 과제가 이월되었으며, '04년의 경우는 10월말 현재 24개 전체 중 23개 과제는 계약을 완료했으며, 1개 과제는 현재 공고 중(국민민권의식조사)에 있어 사고이월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동 사업과 관련하여 검토할 사항은

첫째, 인권영역의 실태조사를 전적으로 외부용역에 의존하고 있으나, 사업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인권위원회 직원들로 자체 조사단을 구성하여 실태 파악을 하도록 하는 것이 현장감 있는 정책수립에 보다 효과적이며, 국가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되는 바, 외부 연구용역 건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둘째, '05년의 경우는 연구과제가 18건으로서, '04년 24건에 비해 6건이나 감소했음에도 예산액은 '04년과 동일하게 제상한 것은 과다제상으로 생각되는 바, 실집행 가능액을 예산에 반영토록 해야 할 것임.

(3) 인권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1121-299)

- 동 사업은 "One-Clicic 인권행정정보화구축"을 목표로 홈페이지, 진정처리, 전자결재, 문서관리, 지식관리, 행정지원시스템 등을 통합·구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05년 예산안은 '04년 보다 1억3,100만원이 증액된 10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음.

< 2005년도 예산안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03 예산	'04 예산 (A)	'05예산안 (B)	증 감		비고
					%	
계	1,143	962	1,093	131	13.6	
○정보시스템 운영	640	697	848	151	21.7	
○사이버인권교육시스템 구축	337	200	200	-	-	
○장애인용 홈페이지 음성서비스	-	-	45	순증	순증	
○서버보안관리 시스템 구축	-	65	-	순감	순감	
○ITI인권상담 지원시스템 구축	166	-	-	-	-	

- 동 사업의 집행실적을 보면 매년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사업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이월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02	1,488(예비비)			512	651	295
'03	1,143	681	1,824	1,208	332	284
'04. 9월말기준	961	332	1,293	814		

이와 같은 집행부진 사유에 대해 인권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 예산이 이월되었고, 이로 인해 인터넷통신 전용회선 사용료와 임차료 등이 불용되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음.

- 동 사업의 집행부진 문제가 매년 계속되고 있음에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동 사업이 철저한 계획 하에 추진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 외에도 사업예산이 과다 편성된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 바, 실질행 가능액을 예산에 반영토록 하여야 할 것임.

2005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04. 12. 3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04년 10월 2일
2. 회부일자 : 2004년 11월 29일
3.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0회국회(정기회)

○ 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 11. 29)

- 상정
- 제안설명(기획예산처장관)
-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 종합정책질의 및 답변(경제부처, 비경제부처)

○ 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 11. 30)

- 종합정책질의 및 답변(경제부처, 비경제부처; 계속)

○ 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 12. 1)

- 종합정책질의 및 답변(경제부처)

○ 제9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 12. 2)

- 종합정책질의 및 답변(경제부처; 계속)

○ 제10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 12. 3)

- 종합정책질의 및 답변(비경제부처)

○ 제1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 12. 4)

- 종합정책질의 및 답변(비경제부처; 계속)

○ 제1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 12. 6)

-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조정소위원회 구성

제251회국회(임시회)

○ 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 12. 31)

-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수정의결

9. 국가인권위원회

가. 일반회계

<세 출>

(1) 인권의식 홍보 강화(1101-212)

□ 동 사업은 TV등 대중매체광고와 취약 지역에 대한 진정권 안내 및 리플렛 등을 제작·배포함으로써 인권위원회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05년 예산안은 '04년과 동일한 3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역을 보면 진정안내 TV광고에 2억9,900만원과 진정홍보를 위한 리플렛 제작 등에 5,800만원으로 되어있음.

□ 동 사업의 집행실적을 보면, '03년의 경우 신설부서인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및 기능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목적으로 세계인권선언기념일(12월 10일)에 맞추어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3일간 KBS, MBC, SBS 등에 총 240회 방송(SA급, A급, B급 등 혼용)을 하였음.

동 사업 추진을 위해 당초 예산액 3억5,700만원이 부족하여 사업간 조정을 통해 인권의식향상 매체 발간비에서 2억원을 추가로 배정받아 총 5억5,300만원을 집행하였음.

□ '04년의 경우는 총 예산 3억5,700만원 중 9월말 현재 리플렛 제작 등을 위해 2,800만원을 집행하였을 뿐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함. 동위원회는 집행부진 사유에 대해 TV광고 미 실시에 의한 것으로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전후하여 12월경 KBS, MBC, SBS등에 80여회 방송을 계획하고 있으

므로,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 동 사업과 관련하여 검토할 사항은

첫째, 국민들에게 인권홍보를 위한 TV광고는 동 위원회의 출범 초에 한 두 해는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나, 정부부처인 동 위원회가 세계인권선언일에 맞추어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대대적인 TV광고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가 있으며,

둘째, 동 사업과 별도로 인권관련 정보 및 주요현안을 홍보하기 위한 매체발간 및 웹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인권의식향상 매체발간비가 '05년 예산에 4억5,500만원이 계상되어있어, TV광고가 아니더라도 국민들에게 인권홍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TV광고를 통한 대국민 인권홍보는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인권 상황 실태조사(1111-212)

□ 동 사업은 인권 영역의 기초 실태조사를 통한 인권 상황판단의 기초 자료 확보 및 법령·제도·정책·관행 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05년 예산안은 '04년과 동일한 7억2,400만원이 계상되었음.

□ 동 사업은 모두 외부용역에 의한 연구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05년의 경우 18개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 2005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예정) >

< 최근 3년간 사업집행 현황 >

해당연도	분야	2005
구분		과제명
정책연구 (2)		생명윤리 의식조사 및 가이드라인 개발연구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상 지위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
기반연구 (9)	자유권	다수인보호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유형 및 지침개발연구
		사법절차 상 인권침해실태조사
	평등권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실태 및 이동권 보장현황 실태조사
		취업과정에서의 학력차별현황 실태조사
		공공부문 고용차별 유형 및 판단기준 지침개발 연구
	사회권	차상위계층 미학령기 아동의 보육현황 실태조사
		가출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노인의 기초생활보장현황 인권실태조사
		주거권보장을 위한 재개발사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인권현안 (6)	부서 별요
전투경찰 제도개선 및 인권실태조사		
인권실태조사 체계화를 위한 조사방법론 개발연구		
시민의 인권신장을 위한 '모범적 공치' 실태조사		
사회권 관련 판례분석 연구조사		
고용허가제 이후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조사		
인권의식 (1)		외국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동 사업의 집행실적을 보면 사고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단위: 백만원)

연 도	예산총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02	750	645	105	-
'03	840	538	396	11
'04. 9월말 기준	724	399		-

□ 그 주된 이유는 연구용역계약이 대부분 하반기에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연구용역과제 중 연구수행 직격자가 없어 사업추진이 지연된데 기인함. '02년의 경우 29개 중 5개 과제가 '03년의 경우 23개 과제 중 13개 과제가 이월되었으며, '04년의 경우는 10월말 현재 24개 전체 중 23개 과제는 계약을 완료했으며, 1개 과제는 현재 공고 중(국민인권의식조사)에 있어 사고이월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동 사업과 관련하여 검토할 사항은

첫째, 인권영역의 실태조사를 전적으로 외부용역에 의존하고 있으나, 사업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인권위원회 직원들로 자체 조사단을 구성하여 실태 파악을 하도록 하는 것이 현장감 있는 정책수립에 보다 효과적이며, 국가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되는 바, 외부 연구용역 건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둘째, '05년의 경우는 연구과제가 18건으로서, '04년 24건에 비해 6건이나 감소했음에도 예산액은 '04년과 동일하게 계상한 것은 과다계상으로 생각되는 바, 실질행 가능액을 예산에 반영토록 해야 할 것임.

(3) 인권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1121-299)

- 동 사업은 “One-Clicic 인권행정정보화구축”을 목표로 홈페이지, 진정처리, 전자결재, 문서관리, 지식관리, 행정지원시스템 등을 통합·구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05년 예산안은 '04년 보다 1억3,100만원이 증액된 10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음.

< 2005년도 예산안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03 예산	'04 예산 (A)	'05예산안 (B)	증 감		비고
					%	
계	1,143	962	1,093	131	13.6	
○정보시스템 운영	640	697	848	151	21.7	
○사이버인권교육시스템 구축	337	200	200	-	-	
○장애인용 홈페이지 음성서비스	-	-	45	순증	순증	
○서버보안관리 시스템 구축	-	65	-	순감	순감	
○ITI인권상담 지원시스템 구축	166	-	-	-	-	

- 동 사업의 집행실적을 보면 매년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사업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이월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02	1,488(예비비)			512	651	295
'03	1,143	681	1,824	1,208	332	284
'04. 9월말기준	961	332	1,293	814		

이와 같은 집행부진 사유에 대해 인권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 예산이 이월되었고, 이로 인해 인터넷통신 전용회선 사용료와 임차료 등이 불용되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음.

- 동 사업의 집행부진 문제가 매년 계속되고 있음에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동 사업이 철저한 계획 하에 추진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 외에도 사업예산이 과다 편성된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 바, 실집행 가능액을 예산에 반영토록 하여야 할 것임.

200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수 정 안

2004.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총 괄

가. 예산안 규모

- 순계규모 : △9,618억원 감소
 - 일반회계 28,594억원 증가, 특별회계 △38,212억원 감소
- 일반회계 규모 : 28,594억원 증가 (131.5 → 134.4조원)
 - 회계 이관분(교육양여금) 제외시 △11,178억원 감소 (131.5 → 130.4조원)

(단위 : 억원)

세 입		세 출	
□ 세입 증액	42,224	□ 세출 감액	64,821
【 일반회계 】	39,804	○ 교육재정양여금	39,772
○ 교육세	39,772	○ 공적자금상환	10,000
○ 세외수입	32	○ 대러차관 대지급	2,725
【 특별회계 】	2,420	○ 공자기금이자	2,760
○ 석유수입부과금 등 (예특)	1,639	○ 예비비	2,898
○ 공자기금예수금 (재특)	500	○ SOC	2,053
○ 전년도 이월금 등 (농특)	116	○ 농어촌	1,694
○ 매각수입 등 (국특)	165	○ 교육	1,048
		○ 기타	1,871
□ 세입 감액	51,842	□ 세출 증액	55,203
【 일반회계 】	11,210	○ 교육재정교부금 (교육세분)	39,772
○ 내국세	210	○ 디지털 국력강화대책	2,562
○ 공자기금예수금	11,000	○ 기초생활보장	1,993
【 특별회계 】	40,632	○ 에너지투자	2,130
○ 지방교육양여세 (교육양특)	39,772	○ SOC (ITS 제외)	2,764
○ 재특회계예탁이자수입 (예특)	30	○ 농어촌 (쌀 개방대책 등)	1,754
○ 예특예수금 (재특)	500	○ 교육 (교육세분 제외)	1,208
○ 기타 영업외접수입 등 (통특)	138	○ 기타	3,020
○ 공자기금예수금 (국특)	177		
○ 주세 (국특)	15		
합 계	△9,618	합 계	△9,618

3.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가. 감액

(단위 : 백만원)

소 관	회 계	사 업 명	정부안	감 액	비 고
국 회	일 반	· 국회사무처인건비	167,985	△380	
		· 국회청사관리부위탁	4,717	△28	
		· 행정회지원보조금	9,526	△195	
		· 국회예산정책처인건비	5,327	△97	
중앙인사위원회	일 반	· 혁신관리교육지원	2,450	△500	
기획예산처	일 반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추진 기획단운영	1,316	△50	
		· 예비비	2,550,000	△289,841	
법 무 부	일 반	· 공안수사	2,277	△150	
		· 행정서비스혁신능력개발	2,385	△1,070	
	국유재산관리	· 법무시설	144,000	△3,000	
법 제 처	일 반	· 연합통신수수료	78	△30	
감 사 원	일 반	· 감사활동경비	14,791	△28	
		· 예비금	510	△485	
헌법재판소	일 반	· 배니스위원회부담금	56	△56	
		· 예비금	510	△485	
대 법 원	일 반	· 예비금	2,360	△2,100	
		· 국가인권위원회법해설집발간	101	△15	
국가인권 위 원 회	일 반	· 인권용어사전제작	150	△150	
		· 인권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	1,093	△100	
		· 어린이옹부패방지교육컨텐츠 개발	25	△25	
부패방지 위 원 회	일 반	· 지역부정부패신고센터운영	200	△200	

(단위 : 백만원)

소 관	회 계	사 업 명	정부안	감 액	비 고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일 반	· 행정서비스국민평가	410	△50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7,889	△100	
(출연연구기관)	일 반	· 국제금융협력	177	△13	
국가보훈처	일 반	· 행정서비스혁신능력개발	157	△42	
		· 전자상거래 · 특수판매시장 질서확립	312	△13	
공정거래 위 원 회	일 반	· 부당공동행위제보자보상제도	50	△50	
		· 부당지원행위조사등실태조사	200	△25	
		· 행정서비스혁신능력개발	171	△6	
재정경제부	일 반	· 동북아금융허브탐운영	200	△50	
		· 동북아시아대외원회운영	2,100	△100	
		· 공자기금예수원리금상환	2,279,000	△122,621	
		· 한국투자공사출자	10,000	△10,000	
		· 대러차관보증채무이행	743,500	△272,455	
		· 공격자금상환기금전출	2,300,000	△1,000,000	
		· 공자기금예수원리금상환	1,464,666	△137,927	
		· 에특예수원리금상환	15,000	△3,000	
		· 공자기금예수원리금상환	8,683	△1,834	
		· 예비비	993	△521	
국 세 청	일 반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운영지원	530	△200	
		· 영수증복권사업	10,500	△1,660	
관 세 청	일 반	· 행정서비스혁신능력개발	953	△398	
		· 행정서비스혁신능력개발	241	△85	
조 달 청	조 달	· 예비비	993	△521	
		· 행정서비스혁신능력개발	186	△29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

1. 세출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

장		2004년 예산안	2003년 예산	증 △ 감
관	항			
장 130	일반행정	(\$204,907) 19,667,272	(\$184,118) 18,918,744	(\$20,789) 748,528
131	일반행정	(\$204,907) 19,667,272	(\$184,118) 18,918,744	(\$20,789) 748,528
	1100 인권 행정	(\$204,907) 19,667,272	(\$184,118) 18,918,744	(\$20,789) 748,528
국가인권위원회 세출 합계		(\$204,907) 19,667,272	(\$184,118) 18,918,744	(\$20,789) 748,528

2. 정 원 및 봉 급

(단위 : 인, 천원, \$)

구분 세항별	국 원 상	부 원 상	차 관 (급)	일 반 직									기 공 직	일 반 계 약 직	2004년 예산안		2003년 예산		증 △ 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예산액	정원	예산액	정원	예산액
1101 기관운영	1		3	1	5	2	27	37	32	25	-	-	32	17	182	3,677,786	181	2,963,128	1	714,658
합 계	1		3	1	5	2	27	37	32	25	-	-	32	17	182	3,677,786	181	2,963,128	1	714,658

3. 기 타 직 보 수 활 용 현 황

(단위 : 인, 천원, \$)

구분 세항별	전문직	청원경찰	공익근무 요원	2004년 예산안		2003년 예산		증 △ 감	
				정원	예산액	정원	예산액	정원	예산액
1101 기관운영	8	1	13	22	408,485	29	727,087	△7	△318,602
합 계	8	1	13	22	408,485	29	727,087	△7	△318,602

4. 세출 예산 사항 별 설명

(단위 : 천원, \$)

항		2004년 예산안	2003년 예산	증 △ 감	사업 개요 및 경비 내역
세항	사항				
광 130	일반 행정	(\$204,907)	(\$184,118)	(\$20,789)	
		19,667,272	18,918,744	748,528	
관 131	일반 행정	(\$204,907)	(\$184,118)	(\$20,789)	
		19,667,272	18,918,744	748,528	
항 1100	인권 행정	(\$204,907)	(\$184,118)	(\$20,789)	
		19,667,272	18,918,744	748,528	
1101 기관 운영	1. 인건비	(\$64,000)	(\$45,400)	(\$18,600)	<경비내역> 1. 정원 180명 (별도정원 : 2명) - 정무직 4명, 일반직(별정직계약직포함) 144명, 기능직 32명 * 기타 : 전문계약직 8명, 청원경찰 1명, 공익근무요원 13명
		14,406,003	13,642,347	763,656	
	2. 기본사업비	(\$64,000)	(\$45,400)	(\$18,600)	
	3. 주요사업비	5,666,064	5,418,276	247,788	
	가. 인권관련 언론 모니터링	1,069,484	1,024,661	44,823	
	나. 인권익식 홍보강화	-	75,200	△75,200	
		356,910	357,100	△190	<사업개요> 1. 소외계층, 취약지역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진정안내 및 인권익식 홍보 <경비내역> 1. 진정안내 홍보물(리플릿, 포스터, 스티커)제작·배포 76,910 2. 지하철 광고 제작·배포 280,000

(단위 : 천원, \$)

항		2004년 예산안	2003년 예산	증 △ 감	사업 개요 및 경비 내역
세항	사항				
1111 인권정책국	다. 인권익식향상 매체 발간	419,136	423,274	△4,138	<사업개요> 1.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월간지 및 이메일진 발간·배포 <경비내역> 1. 인권월간지 발간·배포 401,136 2. 이메일진·웹사이트 제작 및 서비스 제공 18,000
	라. 인권전문 상담원 운영	178,964	169,087	9,877	<사업개요> 1. 상담일부 경험자를 전문상담원으로 위촉하고 인권·상담·법률 분야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인권 상담 전문성 제고 <경비내용> 1. 전문상담요원 양성 및 운용 178,964
	마. 인권순회상담	114,474	-	114,474	<사업개요> 1. 5개 지역 임시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상담 및 진정접수 실시 <경비내역> 1. 인권순회상담 114,474
	1. 기본사업비	1,268,407	1,142,023	126,384	
	2. 주요사업비	198,339	163,723	34,616	
	가. 인권청문회운영	1,070,068	978,300	91,768	
		33,979	34,000	△21	<사업개요> 1. 인권권안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 등이 출석하는 청문회 운영 <경비내용> 1. 청문회 운영 33,979

(단위 : 천원, \$)

항		2004년 예산안	2003년 예산	증 △ 감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
세항	사항				
1121 행정지원국	나. 인권보호정책및 제도구축	982,372	944,300	38,072	<사업개요> 1. 인권보호 및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장기 계획 수립, 인권상황 실태조사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요 인권 현안에 대한 연구 및 대안 마련 등의 사업 시행 <경비내역> 1. 중장기NAP 이행점검 28,683 2. TF 운영 60,144 3. 인권상황 실태조사 823,545 4. 인권관련 문헌번역 70,000
	다. 인권법령 정비시스템	53,717	-	53,717	<사업개요> 1. 인권침해 및 차별의 소지가 있는 법령을 선정·검토하여 소관부처에 입법 반영토록 조치 <경비내역> 1.차별관련 법령 및 프라이버시 관련 법령 정비 53,717
		1,152,962	1,408,862	△255,900	
	1. 기본사업비	191,577	265,799	△74,222	
	2. 주요사업비	961,385	1,143,063	△181,678	
가. 인권정보시스템 구축	961,385	1,143,063	△181,678	<사업개요> 1. 국가인권위원회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경비내역> 1. 정보시스템 운영 696,885 2. 사이버 인권교육 확대 200,000 3. 통합보안관계 시스템 구축 64,500	

(단위 : 천원, \$)

항		2004년 예산안	2003년 예산	증 △ 감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
세항	사항				
1131 인권침해조사국		224,541	226,747	△2,206	
	1. 기본사업비	224,541	226,747	△2,206	
1141 차별조사국		159,537	311,527	△151,990	
	1. 기본사업비	118,549	111,387	7,162	
	2. 주요사업비	40,988	200,140	△159,152	
	가. 인권침해 조사 구제 기법 개발	40,988	162,553	△121,565	<사업개요> 1. 인권선진국의 조사구제기법 및 사례를 연구·분석하여 우리현실에 적용가능한 조사구제기법을 개발함으로써 조사 및 직원교육에 활용 <경비내역> 1. 조사구제 기법 및 방법론 개발 40,988
	나. 인권차별 판단 기준정립	-	37,587	△37,587	
		(\$140,907)	(\$138,718)	(\$2,189)	
1151 교육협력국		2,455,822	2,187,238	268,584	
	1. 기본사업비	(\$20,065)	(\$19,729)	(\$336)	
		192,161	168,757	23,404	
	2. 주요사업비	(\$120,842)	(\$118,989)	(\$1,853)	
		2,263,661	2,018,481	245,180	

(단위 : 천원, \$)

항		2004년 예산안	2003년 예산	증 △ 감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
세항	사항				
	가.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290,975	223,750	67,225	<사업개요> 1. 인권교육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분야별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분야별 시민실천프로그램 마련·보급 <경비내역> 1. 인권교육발전 종합프로젝트 45,686 2. 인권전문강사인력양성 46,679 3. 인권교육시범학교 운영 54,784 4. 시민실천프로그램 143,826
	나. 인권관련 단체지원	200,000	200,000	-	<사업개요> 1. 시민단체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인권사업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사업비 일부를 지원 <경비내역> 1. 인권관련 단체지원 200,000
	다. 차별예방 및 인권문화제	903,819	1,025,824	△122,005	<사업개요> 1. 일상의 차별의식 행태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한편 반차별을 주제로 한 문화 콘텐츠의 확산 <경비내역> 1. 인권선언문화제(인권주간 준비) 138,261 2. 차별예방사업(영화제작, 만화집 및 사진집 제작) 765,558
	라. 인권교육교재 개발	320,110	320,200	△90	<사업개요> 1. 공무원 및 학생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교재 개발, 어린이의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인권동화책 제작

(단위 : 천원, \$)

항		2004년 예산안	2003년 예산	증 △ 감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
세항	사항				
	마. 국제인권회의 참석	(\$92,580) 210,685	(\$95,727) 210,635	(△\$3,147) 50	<경비내역> 1. 공무원 인권교육교재 개발 57,400 2. 학교인권교육교재 개발 155,100 3. 인권동화책 발간 107,610 <사업개요> 1. APF 및 UN 주관 인권회의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인권현황·활동상황 보고 및 세계 인권현황 연구 <경비내역> 1. APF 관련 회의 참가 35,602 2. UN 인권관련 회의 참가 175,083
	바. 국가인권기구 교류연수	(\$23,262) 38,072	(\$23,262) 38,072	(\$-) -	<사업개요> 1. 외국 인권기구와의 인적교류를 통한 상호 협력 증진 <경비내역> 1. 국가인권기구 교류 협력을 위한 국외여비 38,072
	사. 동북아인권 워크샵 개최	(\$5,000) 200,000	-	(\$5,000) 200,000	<사업개요> 1. 워크샵을 통한 세계 각국의 인권관련 기구·단체·전문가의 상호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경비내역> 1. 워크샵 개최 운영경비 및 외빈 초청 경비 200,000

(단위 : 천원, \$)

항		2004년 예산안	2003년 예산	증 △ 감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
세 항	사 항				
	아. APF 활동 지원	100,000	-	100,000	<사업개요> 1. APF 사업 지원을 통한 우리의 인권수준 향상 및 국제연대·상호협력 <경비내역> 1. 지원금 100,000
국가인권위원회 세출 합계		(\$204,907) 19,667,272	(\$184,118) 18,918,744	(\$20,789) 748,528	

<目 次>

2004년도 국가인권위원회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일 반 회 계)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한 길

I. 예산안 총괄	1
1. 규모	1
2. 정부 일반회계와의 비교	1
3. 예산요구액 대 조정액	1
II. 세출예산액 내역	2
1. 세항별 예산액 내역	2
2. 경비별 예산액 내역	3
III. 검토의견	5
III. 2004년도 세출예산안 조정의견	20

* 참고자료

- 【별표1】 2004년도 예산안 총괄표
- 【별표2】 2004년도 예산안 주요증감 명세
- 【별표3】 최근 3년간 “인권상황실태조사” 용역비 예산 및 집행추이
- 【별표4】 2003년도 인권시민단체 지원사업 및 단체현황
- 【별표5】 2002년도 결산심사시 지적사항의 예산안 반영여부

2003년 9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I. 예산안 총괄

1. 규모

2004년도 국가인권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은 없고, 세출예산안은 196억 6,727만원임. 이는 전년도 예산안 189억 1,874만원 대비 4.0%에 해당하는 7억 4,853만원이 증액된 금액임.

(별표 1. '2004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안 총괄표' 참조)

2. 정부 일반회계와의 비교

국가인권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96억 6,727만원은 정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액 117조 5,429억원의 0.02%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비율은 전년도(0.02%)와 동일한 수준임.

3. 예산요구액 대 조정액

국가인권위원회가 당초 예산당국에 요구한 2004년도 세출예산액은 243억 1,578만원이었으나, 인건비 3,254만원이 감액되고, 사업비는 46억 1,597만원이 삭감되어 196억 6,727만원으로 조정되었음.

(별표 1. '2004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안 총괄표' 참조)

II. 세출예산액 내역

1. 세항별 예산액 내역

2004년도 국가인권위원회소관 예산액을 세항별로 살펴보면, 기관운영(1101) 144억 600만원, 교육협력국(1151) 24억 5,600만원, 인권정책국(1111) 12억 6,800만원 등의 순위로 계상되어 있음.

< 세항별 예산액 내역 >

(단위:백만원)

구 분	2003예산	2004예산안	증감율(%)
합 계	18,919	19,667	3.9
- 기관운영(1101)	13,642	14,406	5.6
- 인권정책국(1111)	1,142	1,268	11.1
- 행정지원국(1121)	1,409	1,153	△18.2
- 인권침해조사국(1131)	227	225	△1.0
- 차별조사국(1141)	312	159	△48.8
- 교육협력국(1151)	2,187	2,456	12.3

2. 경비별 예산액 내역

세출예산액 196억 6,727만원은
 인건비 76억 7,045만원
 사업비 119억 9,682만원으로,

그 구성비율은 인건비 39.1%, 사업비 70.9%임.

(※ 전년도 구성비율은 인건비 38.1%, 사업비 61.9%이었음)

- 인건비의 경우, 전년도 예산액(71억 9,941만원) 대비 6.5% 4억 7,105만원이 증액된 수준임.
- 사업비의 경우, 전년도 예산액(117억 1,933만원) 대비 2억 7,748만원이 증액된 수준임.

가. 인건비

인건비는 76억 7,04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71억 9,941만원)보다 4억 7,104만원이 증액되었는바, 그 증액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음.

< 인건비 증액내역 >

(단위:백만원)

구 분	2004예산(안) (A)	2003예산 (B)	증감	
			금액(B-A)	%
계	7,199	7,670	471	6.5
기 본 급	5,890	6,672	782	13.3
기타직 보 수	727	408	△319	△43.8
직무수행경비	582	590	8	1.3

나. 사업비

사업비는 119억 9,68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117억 1,933만원)보다 2억 7,748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인권교육프로그램 운영(2억 9,1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하여 6,700만원 증액되었고, 인권순회상담(1억 1,400만원), 동북아인권워크샵(2억원), APF활동지원 (1억원) 인권법령정비시스템 구축(5,4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주요 사업비에 새로이 계상됨.

사업비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백만원)

사 업 명	2004예산안 (A)	2003예산 (B)	증 감	
			금액(A-B)	%
계	11,997	11,720	277	2.4
○ 기본사업비	6,591	6,355	236	3.7
1. 경상적기본사업비	6,591	5,887	704	11.9
2. 기준성기본사업비	-	411	△411	순감
3. 교육훈련기본사업비	-	57	△57	순감
○ 주요사업비	5,406	5,365	41	0.8
1. 인권의식 홍보 강화	357	357	-	-
2. 인권의식 향상 매체 발간	419	423	△4	△0.9
3. 인권전문상담원 운영	179	169	10	5.9
4. 인권순회상담	114	-	114	순증
5. 인권청문회 운영	34	34	-	-
6. 인권보호 정책 및 제도 구축	982	944	38	4.0
7. 인권법령 정비시스템 구축	54	-	54	순증
8. 인권정보시스템 구축	962	1,143	△181	△15.9
9. 인권침해 조사구제기법 개발	41	163	△122	△74.8
10. 인권 교육프로그램 운영	291	224	67	29.9
11. 인권관련 단체 지원	200	200	-	-
12. 차별예방 및 인권문화제	904	1,026	△122	△11.9
13. 인권교육 교재 발간	320	320	-	-
14. 국제인권회의 참석	211	211	-	-
15. 국가인권기구 교환연수	38	38	-	-
16. 동북아 인권 워크샵 개최	200	-	200	순증
17. APF활동 지원	100	-	100	순증
18. 언론모니터링 및 캠페인	-	75	△75	순감
19. 인권차별 판단 기준 정립	-	38	△38	순감

Ⅲ. 검토의견

2003년도 국가인권위원회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산증감추이 및 인력운용에 관한 사항

2004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은 전년대비 3.9% 증가한 196억 6,700만원으로서 정부전체 일반회계 예산증가율인 5.4% (2003년도 본 예산 대비)에 비해서는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바, 이는 주요사업비가 2003년도 예산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인건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늘어남에 주로 기인합니다. 또한,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증감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도 예산안은 인권위 출범당시인 2002년도 예산(192억 300만원)에 비하여 소폭 상승한 수준(2.4%)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인권위 예산증감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02		'03		'04	
	예산	증감율	예산	증감율	예산	증감율
합계	19,203		18,919	△1.5	19,667	3.9
인건비	5,309		7,199	35.6	7,670	6.5
기본사업비	9,372		6,355	△32.2	6,591	3.7
주요사업비	4,522		5,365	18.6	5,406	0.8

※ '02년도 신규(예비비) 편성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운용현황을 살펴보면, 2003. 10 현재 정원 180인 가운데 9인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고, 그 내역은 조사기획담당관·법제개선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 등 주요부서 책임자급에서 결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인권위 사무처가 발족('02. 4)된 지 1년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주요부서 핵심인력의 조속한 충원으로 조직의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부처·시민단체·공기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충원된 인권위의 인력구조를 감안하여 인권위 조직의 통합을 다져가는 작업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최근 3년간 인권위 정원대비 현원현황>

구분	'01			'02			'03/10		
	정원	현원	비고	정원	현원	비고	정원	현원	비고
총계		4		180	164		180	172	

2. APF 활동지원 기부금

예산과목 해외경상이전(307-01)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인권기관간의 상호 교류·협력기구인 “아·태 국가인권기구포럼”(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이하 “APF”)의 활동지원을 위한 기부금으로서 1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제기구 지원금 성격의 해외경상이전은 한번 예산에 반영되면 매년 반복하여 계상되는 속성을 띠므로, 신규예산으로 편성되는 현시점에서 당해 국제기구의 성격, 재정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지원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액이 확정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APF의 개황을 살펴보면, APF는 1996년 7월에 창설되어 호주 시드니에 본부를 두고 있고,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2개국을 회원국으로 하여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간의 상호 교류협력 및 교육훈련 등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2년 11월에 가입하였습니다.

<APF 회원국(12개국) 현황>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피지, 스리랑카, 몽고, 네팔, 태국, 말레이시아, 한국

APF에 대한 재정지원의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이번에 APF에 대한 기부금 예산이 반영될 경우 호주와 뉴질랜드 등 태평양권이 주도하고 있는 APF에서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의 APF 재정지원국이 되어 APF 내에서 중요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고, 나아가 UN 등 각종 국제기구의 인권활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으며, 장차 APF 사무국에 인권위 직원을 파견하여 적극적인 자료수집 및 교류협력의 기반 마련을 도모할 수 있는 점 등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APF 재정지원 현황>

(2002년 기준)

재원	지원금	환율('03.5 현재)	한화(원)
계			1,126,340,000원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820,000호주달러	772원	633,040,000원
호주 정부	550,000호주달러	"	424,600,000원
뉴질랜드 정부	100,000뉴질랜드달러	687원	68,700,000원

한편, 기부금 규모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위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APF에 대한 재정지원은 유엔, 호주 및 뉴질랜드 등 세 곳으로부터 연간 11억 2,634만원('02년 기준)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APF 12개 회원국들간 경제력을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회원국 중 GDP 및 GNI 2위, 1인당 국민소득 3위) 및 우리나라의 여타 국제기구 지원금과의 규모비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번에 계상된 APF 기부금(연1억원)의 규모는 비록 뉴질랜드의 지원규모보다는 많으나 그리 과다한 계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 집니다.

<APF 12개 회원국 경제력 비교>

국가별	GDP(백만)	GNI(백만)	1인당 국민소득	비고
한국	476,690	473,050	9,930	US 달러 기준
호주	410,590	386,623	19,740	
뉴질랜드	58,178	53,055	13,710	
인도	515,012	501,532	480	
몽골	1,262	1,088	440	
필리핀	77,076	81,453	1,020	
태국	126,407	122,240	1,980	
말레이시아	95,157	85,956	3,540	
인도네시아	172,911	149,879	710	
네팔	5,493	5,620	230	
스리랑카	16,373	15,894	840	
피지	1,878	1,775	2,160	

※ 자료출처 :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World Bank (2003.6월)

<한국정부의 주요 국제기구 지원현황>

정부 부처	지원대상 국제기구	지원금	예산과목	기타 (지원형태, 지원시기 등)
노동부 (국제협력관)	ILO (국제노동기구)	연600만달러 (60억정도)	국제기구 출연금	○분담금 형태 ○모든 회원국이 다 분담금을 내며, 기준은 나라별 인구규모, GDP, 경제규모에 따라 매년 UN에서 Guideline이 나옴.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	WHO (세계보건기구) 사무처(WPRO)	- 1999년, 1억원 (7만5천달러) - 2000년, 3억5천만원 (약 30만달러) - 2001년, 10억원 (77만6천달러)	해외경상 이전과목	○기여금(자발적 기여금 형태) ○Membership fee는 아니며, 지원국은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일본, 한국 등 ○특정사업 지정하여 특정사업 시행시 한국의 승인을 거침
문화관광부 (체육국)	국제도핑센터	연 8만달러		○국제협약의 일종으로 회원국의 회비형태로 지급
외교부 (UN정책과)	UN 인권고등 판무관실	연 10만달러 정도	국제기구 분담금	○기술협력기금(자발적인 기여금 형태) ○해당 당사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시 기여금 지불

* 자료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이번 APF 재정지원은 그 기대효과 및 지원규모의 적정성의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만, 이번 신규예산의 시급성 내지 불요불급성의 측면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즉, (1) 현재 APF의 12개 회원국 가운데 재정지원국은 지난 96년 APF 창설을 주도했던 호주와 뉴질랜드 등 2개국에 불과한 실정에서 우리나라가 APF에 회원국으로 가입된 지 아직 1년이 채 안되었다는 점1), (2) 동북아인권위크숍 · APF를 비롯한 각종 국제회의 참석예산 및 국제인권기구 교환연수 등 인권위 자체예산에 국제회의 및 국제교류 관련예산이 유사 인력규모의 여타 행정기관에 비하여 풍부하게 배정되어 있어 APF 기부금 여부에 관계없이 인권위가 국제무대에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이 예산상 마련되어 있는 점2), (3) 기타사항으로서, 인도 국가인권위원장이자 APF 의장인 A. S. Anand 의장이 금년 5월 우리 정부에 APF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는 등 인도의 경우 현재 APF 재정지원국이 아니면서도 APF 의장국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시아권에서 대표적인 국제기구 재정지원국인 일본의 경우에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APF의 비회원국/비재정지원국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APF에 대한 기부금 예산의 신규편성이 현 시점에서 시급하고도 절박한 예산이나에 대하여는 회의적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번에 우리 법사위원회 소관인 헌법재판소의 2004년도 예산안에서도 해외경상이전과목에서 “비니스 위원회” 분담금 명목으로 5,800만원(헌법재판소 예산안 명세서 p76)이 신규로 편성되고 있는 등

1) 우리나라와 APF 사무국간 자금지원 협의도 최근(2003. 8월)에 진행된 바 있음.

2) APF기부금(1억원), 동북아인권위크숍(2억원) 및 국가인권기구교환연수(3,800만원)등의 대외활동 예산과는 별도로, APF 연례회의 · APF 위크숍 · UN주관 국제회의 등 각종 국제인권회의 참석예산으로 2억 1,068만원 (예산과목 1151-215), 외국인권기구등 방문예산으로 4,417만원 (국외여비 1151-202-02) 등 2억 5,485만원의 해외방문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예산안 명세서 92-93쪽 및 101-105쪽 각 참조).

최근 각종 국제기구에 대한 기부금 또는 분담금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바, 차제에 우리 정부의 각종 해외경상이전에 대한 개별적 타당성 및 시의적절성, 지원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국회 차원에서 시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로, 일반 행정부처의 개별적인 국제기구 지원금을 제외하더라도, 외교통상부의 경우에만 2004년도 국제기구 분담금이 1,423억원으로서 지난해에 비하여 14.9%로 대폭 증가하고 있음. 아래 도표 참조)

<2004년도 외교통상부소관 국제기구분담금(1,423억원) 증액 내역>

2004년 예산안	2003년 예산	증 감	경 비 내 역
1,423억 2,360만원	1,210억 5,280만원	212억 7,080만원 (14.9%증가)	1. UN정규예산분담금: 288억 7,560만원 2. PKO 분담금: 494억 7,120만원 3. 기타 의무분담금: 515억 1,360만원 4. 사업분담금: 94억 320만원 5. 협력기금: 36억6,000만원

* 자료출처: 대한민국정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II', 63쪽.

3. 인권순회상담사업

인권순회상담사업은 지방하부조직이 없어 지방 접근성이 떨어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방순회 인권상담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이들에 대한 인권관련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한편, 현지 상담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인권 감수성의 향상을 도모하는 등의 취지를 지니고 있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 1억 1,400만 원을 2004년도에 새로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인권순회상담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예산	2004예산안	증(△)감		비 고
			금액	%	
계	-	114	114	순증	
○ 순회상담 기획 및 진행경비	-	59			
○ 순회상담 안내 광고	-	55			

인권순회상담사업의 실시계획을 살펴보면, 인권위에서는 5개 지방 도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에 각 2일씩 순회상담을 실시하면서 지역변호사협회와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려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는 바, 지난 해 4월 사무처가

발족되어 아직 기관형성의 와중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에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권위 업무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인권순회상담센터의 운영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순회상담사업의 실시 초기에는 5대 지방 대도시를 대상으로 순회상담하려는 인권위 계획이 그 파급효과의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보여 지나, 향후 중·장기적으로는 인권 접근성이 보다 떨어지는 기지촌·광산촌 등 소도시·벽지에 대한 순회상담을 강화함으로써 인권위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본 사업의 본래 취지에 충실한 예산집행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사업의 행사기간이 각 도시별로 2일간에 불과하여 일회성 홍보경비로 그칠 우려가 없지 아니하고, 지역 시민단체나 법률구조공단·지방변호사협회 등에서 종래 자체적으로 실시해온 인권사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인권위 나름대로 순회상담의 실효성 및 차별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4. 인권관련 문헌번역사업

인권관련 문헌번역사업은 UN 등 국제기구 및 인권관련 기관에서 출판된 문헌을 번역·보급함으로써 인권정책수립의 기초 자료와 인권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인바, 지난 해(7,200만원)에 이어 2004년도 예산안에서는 7,000만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인권관련 문헌번역사업>

(단위:백만원)

구 분	2003예산	2004예산안	증(△)감		비 고
			금액	%	
○ 인권관련 문헌 번역	72	70	△2	△2.8	

설립초기단계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인권과 관련된 각종 국제협약이나 주요 선진국의 인권관련 법률·문서 등을 번역, 축적함으로써 인권정책수립의 기초자료 및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법무부·노동부·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 학계, 시민단체 등 국내유관기관에도 이러한 번역 자료들의 보급·활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의 문헌번역사업 예산편성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문헌번역사업을 일정기간 매년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주요사업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아래 도표 '번역사업의 추진방향' 참조), 향후 중·장기적으로 국제협력담당관·인권연구담

당관 등 인권위 자체의 관련 조직이 안정화되고 인력의 전문성이 축적되어지는 시점에서는 이러한 문헌번역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여 굳이 외부용역화할 필요가 있느냐의 문제, 나아가 외부용역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어떠한 유형의 외국 문헌을 번역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기준의 정립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권위 번역사업 추진방향>

구분	'03 사업	'04 전망	'05전망	'06전망
인권 문헌 번역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UN 공식문헌 중 조사, 인권교육, 국제협력, 정책 등 인권위 업무지원 및 현안중심으로 번역 문헌 목록 작성 총4,658쪽 분량 번역 문헌 선정 2,908쪽 분량만 우선 번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03년도 지속 사업으로 '03년 선정문헌 중 나머지 1,750쪽 문헌 번역 완료 조사업무지원을 위한 선택적 의정서 검토서 지속 번역 기타 유엔 공식 문헌(Fact sheets) 번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04년도 지속사업 EEOC, 유럽인권 재판소, 호주인권위원회, 캐나다 인권위원회 등에서 출판된 차별행위 관련 문헌 번역 인권활동 및 연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ILO, WHO, ESCAP 등 국제기구 출판문헌 중 사회권 관련 문헌 번역

5. 인권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관련 법령의 제·개정안에 대한 사전협의 및 개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단계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5,400만원의 예산을 2004년도에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인권법령시스템 구축사업>

(단위 : 백만원)

구분	2003예산	2004예산안	증(△)감		비고
			금액	%	
계	-	54	54	순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의체 회의 운영 기초자료 축적 위탁 수수료 		37 17	37 17		

이 사업의 골자는 인권관련법령에 대한 검토협의 및 개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이러한 인권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1년간의 협의체의 구성으로 해결되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운영될 때 인권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최근 정부입법에 대비하여 의원입법의 비중이 날로 커져 가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국가인권위원회는 향후 인권법령시스템의 구축시 의원입법과 관련된 인권법령정보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등에 대하여 국회의 법제지원조직(법제실) 등과의 협의 채널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6. 연구개발 용역비

인권보호정책 및 제도구축사업의 용역비 (예산과목 212-206, 예산안 명세서 79쪽) 에서는 '인권상황실태조사' 명목으로 연구개발비 8억이 계상되어 있고, 이는 지난해 예산(8억4,00만원)에 비해서는 0.5%가 감액된 규모입니다. 동 용역사업의 경우 설립초기의 인권위 입장에서는 국내인권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존재하고, 인권상황 개선 및 인권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축적·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예산편성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 예산의 실제집행과 관련하여, 지난 9월 결산 검토보고에서는 '인권상황실태조사' 명목의 용역비 집행에 대한 일부 문제점, 즉, 외부용역을 발주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아니하는 간단한 법률검토 등의 경우에는 인권위 자체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별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인권상황 실태조사" 용역비의 예산 및 집행추이를 살펴보면, 예컨대, 외국인·비정규직 노동자·장애인 차별조사 등에 대한 연구·조사 용역비의 경우 당해사업이 연도별로 반복되어 집행되어지는 중복의 측면이 없지 아니할 뿐 아니라, 지난 2년간 집행된 용역사업의 주제가 다소 광범위하여 이러한 용역사업과 민간단체로 지원되는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과목 304-02)에서 집행되는 일부 사업과의 경계가 다소 불분명한 측면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집행실적을 고려할 때, 당해 용역비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진지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7. 인권관련 민간단체지원

예산과목 민간경상보조(304-02)에서는 인권관련 민간단체지원사업으로서 2억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바, 이는 공모를 통하여 민간 인권단체의 추진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인권단체들의 특화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고 이들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인권운동의 활성화 기반의 강화를 도모하려는 사업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예산	2004예산안	증(△)감		비 고
			금액	%	
○ 인권단체 민간경상보조사업	200	200	-	-	

일반 국민의 인권의식을 제고하는데에는 각종 인권시민단체의 다양한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인권관련 단체가 특화·전문성 수준 및 재정적 측면에서 빈약한 실정에 있음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민간보조사업의 예산편성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다음 도표의 2003년도 인권단체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각 단체별 지원규모가 상당한 편차(300만원~1,365만원)를 보이고 있어 다소 불

균형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일부 사업의 경우 인권위보다는 다른 행정기관의 민간경상정보조사사업에 적합한 대상(예컨대, 환경운동연합 → 환경부, 건강연대 → 보건복지부)으로도 비추어 지고 있는바, 이와 같은 방식의 현행 민간단체지원에 대하여는 그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인권위 차원의 노력이 적극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8. 북한 인권 관련사업

그동안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미국무부의 연례인권보고서 등을 통하여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이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왔으며, 2003. 4월 우리 위원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인권위의 대응을 촉구함에 따라 인권위 내부에 '북한인권연구팀'이 구성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인권 관련사업이 이번 2004년도 인권위 예산안에는 빠져 있는바,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IV. 2004년도 세출예산안 조정의견

이상의 2004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토대로 동 예산안에 대한 삭감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단위 : 천원)

예산안				증감액 (B)	조정액 (A-B)	비고
세항	세세항	목	예산안(A)			
1151 교육협력국	219 APF 활동지원	307 해외경상이 전	100,000	△100,000	-	APF기부금 삭감
1111 인권정책국	213 인권보호 정책 및 제도 구축	206 용역비	800,000	△100,000	700,000	용역비 감액 조정

* 참고자료

【별표1】 200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경비별	2003년 예산(A)	2004년 예산 요구			2004년 예산안		
		요구액(B)	증△감 (B-A)	%	조정액(C)	증△감 (C-A)	%
계	18,919	24,316	5,397	28.5	19,667	748	4.0
1. 인건비	7,199	7,703	504	7.0	7,670	471	6.5
2. 기본사업비	6,355	7,172	817	12.9	6,591	236	3.7
- 경상적기본사업비	5,887	7,172	1,285	21.8	6,591	704	11.9
- 기준성기본사업비	411	-	△411	순감	-	△411	순감
- 교육훈련기본사업비	57	-	△57	순감	-	△57	순감
3. 주요사업비	5,365	9,441	4,076	75.9	5,406	41	0.8
- 인권의식 홍보강화	357	972	615	172.3	357	-	-
- 인권의식 향상 매체 발간	423	505	82	19.4	419	△4	△0.9
- 인권전문상담원 운영	169	293	124	73.4	179	10	5.9
- 인권순회상담	-	141	141	순증	114	114	순증
- 인권청문회 운영	34	86	52	152.9	34	-	-
- 인권보호 정책 및 제도 구축	944	1,640	696	73.7	982	38	4.0
- 인권법령 정비시스템 구축	-	65	65	순증	54	54	순증
- 인권정보화사업비	1,143	1,751	608	53.2	962	△181	△15.9
- 인권침해 조사구제기법 개발	163	102	△61	△37.4	41	△122	△74.8
- 인권 교육프로그램 운영	224	480	256	114.3	291	67	29.9
- 인권관련 단체 지원	200	217	17	8.5	200	-	-
- 차별예방 및 인권문화제	1,026	1,268	243	23.7	904	△122	△11.9
- 인권교육 교재 발간	320	387	67	20.9	320	-	-
- 국제인권회의 참석	211	313	102	48.3	211	-	-
- 국가인권기구 교환연수	38	38	-	-	38	-	-
- 동북아 인권 워크샵 개최	-	298	298	순증	200	200	순증
- APF활동 지원	-	100	100	순증	100	100	순증
- 인권상담 방법론 개발	-	88	88	순증	-	-	-
- 인권을카이브설치 및 운용	-	338	338	순증	-	-	-
- 다수인 보호시설 진정함 설치	-	112	112	순증	-	-	-
- 주요 인권현안 법령정비	-	135	135	순증	-	-	-
- 국제인권전문인력 양성	-	112	112	순증	-	-	-
- 언론모니터링 및 캠페인	75	-	△75	순감	-	△75	순감
- 차별행위 판단 기준 정비	38	-	△38	순감	-	△38	순감

【별표2】

2004년도 예산안 주요증감 명세

(단위:천원)

구분	2003년도	2004년도	증 감	
			금액(%)	사유
인건비	7,199,410	7,670,455	471,045 (6.5)	- 공무원 보수인상 계획에 따른 처우개선(3%)분 반영 - 일반직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17명) 채용
주요사업비	5,364,645	5,405,586	40,941 (0.8)	- 인권순회상담 순증(114백만원) - 동북아인권워크샵 순증(200백만원) - APF활동 지원 순증 (100백만원) - 인권법령정비시스템 구축 순증 (54백만원) - 정보화사업비 감액(181백만원) - 언론모니터링 및 캠페인 등 감액 (246백만원)
기본사업비	6,354,689	6,591,231	236,542 (3.7)	- 청사 입차료 및 관리비 인상에 따른 증액(236백만원)
계	18,918,744	19,667,272	748,528 (4.0)	

【별표3】 최근 3년간 '인권상황실태조사' 용역비 예산 및 집행추이

1. 2002년도 실적 : 예산(연구용역비) 750백만원, 집행 645백만원

(백만원)			
구분	사업명	업체명	집행액
기 반 연 구	시국관련 법령의 입법결정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10
	정보화로 인한 프라이버시권 침해법령 조사 연구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 연대모임	10
	군대 내 구금시설 인권실태 조사를 위한 기초현황 파악	성공회대학교	29
	장애인 차별실태 자료분석을 통한 인권 의식 개선방안 연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
	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10
	장애인 특례입학 전형제도 실행 이후 학내 지원체계 현황조사	한국재활복지대학교	22
	취학연기로 인한 취업연령제한에 따른 장애인 고용차별 실태조사	동의대학교	15
	진 정 사 건 관 련	한국 내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	고려대학교
구금시설의 의료실태조사 및 의료권 보장을 위한 연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55
군대 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천주교인권위원회	32
범죄수사 절차상 피의자의 인권침해 현황 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보안관찰 대상자의 인권침해 사례조사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20
유치장 시설환경 인권실태조사		교도소인권모임	21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인권실태조사		전북대학교	60
장애인 고용 및 승진실태조사		대구대학교	29
공무원 고용상의 평등권 침해에 관한 연구		행정개혁시민연합	15
민간보험상의 장애인 차별실태조사		법무법인 지평	15

(백만원)

구분	사업명	업체명	집행액
부 서 필 요	구금시설 내 진정권 보장현황실태조사**	원광대학교	21
	인권감수성 조사를 위한 지표개발	서울대학교	25
	교사의 인권의식 조사 연구	부산교육연구소	29
기 획 사 업	무료 및 실비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
	부랑인 시설 내 노인인권 현황조사	한국도시연구소	17
	지역사회에서의 노인학대 실태조사	한국노인의전화	70
	이동청소년 관련 법령 검토	법무법인 해람, 연세대학교, 동해대학교, 전주대학교	12
	소년사법 절차상 어린이청소년 인권보호 방안	한양대학교	15

2. 2003년도 실적 : 예산(연구용역비) 840백만원, 집행 565백만원

(백만원)

구분	사업명	업체명	집행액
기반연구	구급시설 내 여성수용자 인권실태조사	한림대학교	23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아동의 인권실태조사	한국사회학회	25
	금융기관과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공유현황 실태조사	함께하는시민행동	23
	군대 내 성폭력 현황 실태조사	성폭력상담소	33
	주거빈곤층 사회권보장현황 실태조사	한국도시연구소	51
	차별관련 법령조사	한국여성개발원	25
진정사건	군 사법제도 운영 및 인권침해 현황 실태조사	울산대학교	40
부서필요	기지촌 지역 혼혈아동 인권실태조사	두레방	27
	국내 거주 화교의 인권실태조사	성공회대학교	29
	사형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주)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	73
	군 수사과정 및 군 영장 인권상황 실태조사	원광대학교	29
	구급시설 내 인권침해의 유형분석 및 지침개발	한국의국어대학교	20
인권현안	국가보안법 적용 실태조사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29
	사회보호법 관련 실태조사	가톨릭대학교	29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68
	비정규직 건강권 보장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강릉대학교	39

※ 11월 중 4개 과제 공고 예정:

공무원 차별관련 인권의식 조사 등 4개과제 275백만원

3. 2004년도 예산안 : 총 20개과제 연구용역비 800백만원

구분	분야	과제명	비고
정책연구		사회복지시설 인권상황실태조사 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인간배아복제 관련 생명권 보호방안 기초연구	
기반연구	자유권	미신고 복지시설 인권실태조사	
		웹터 거주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구급시설 수용 환경 실태조사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인권 실태조사	
		대중교통시설의 장애인 이동권보장 현황조사	
	평등권	공공기관 장애인 이동권 현황조사	
		출소 후 전과자의 차별실태조사	
		독거노인 인권상황실태조사	
	사회권	소년소녀가장 인권상황실태조사	
		한부모가정의 인권상황실태조사	
		한계적 빈곤층 인권상황실태조사	
		외국인노동자 지위에 대한 해외사례 분석	
인권현안	부서필요	채용 전 신체검사에 따른 고용차별 실태조사	
		여성 장애인 고용차별 실태조사	
		공공부문 고용차별 실태조사	
	주요현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인권실태조사	
		일상생활에서의 사생활보장 실태조사	
		인권의식	전국민 인권의식 조사

【별표4】 2003년도 인권시민단체 지원사업 및 단체현황

(단위 : 천원)

번호	사업명	단체명	지원액
1	사범의 인권 및 치우개선을 위한 기초사업	성공회대인권평화센터	12,650
2	해외투자 한국기업 인권현황 백서발간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7,950
3	군인의 전화	군의문사진상구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	8,400
4	여성인권을 찾는 시민감시단 사업	(사)한국성폭력상담소	4,500
5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에 한국시민사회 입장제출 및 보고대회	진보네트워크센터	11,620
6	이주노동자를 위한 인권수집 및 CD발간 보급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13,650
7	'빅브로더 보고서'발간 사업	함께하는시민행동	8,325
8	환자권리중건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건강연대	8,575
9	국제형사재판소와 동북아시아 인권단체연합 제고를 위한 국제 워크샵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9,600
10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용 다류제작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 대체복무제개선을위한연대회의	13,000
11	교직을 바꾸자. 청소년 인권을 찾자	(사)홍사단	5,350
12	여성 장애인 성매매 유입 근절을 위한 연대체 구성과 실천프로그램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10,100
13	중고교 평화 인권반 운영 및 교안개발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9,270
14	지적사회 청소년 인권을 위한 심포지엄 및 인권교실	익산YMCA	4,610
15	가지촌 다큐멘터리 '나와 부엉이' 영/일어 번역 및 자막 편집 사업	두레방	11,613
16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의 보호 및 촉진에 관한 포괄적인 국제조약 홍보 및 교육사업	한국DPI	9,066
17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실무자의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강화 및 인권활동가 양성	(사)부스리기사랑나눔회	6,370
18	제1회 노근리인권 백일장 및 독후감 대회	노근리사건대책위	6,797
19	2003시민을 위한 인권교육프로그램 '울산인권학교'	울산인권운동연대	8,780
20	아시아정의평화연대 활동가 국제회의(JPW) 참석	천주교인권위원회	3,000
21	한국시민사회단체의 국제연대 역량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활동가 국제연대 교육연수	환경운동연합	10,000
22	여성의 빈곤화에 대응하는 동아시아 여성 공동행동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및 네트워크 강화	(사)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9,030
23	회귀단지 절환자의 기본생활권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제도 교육사업	한국백혈병환우회	7,744
합 계			200,000

【별표5】 2002년도 결산심사시 지적사항의 예산안 반영여부

2002년도 결산시 지적사항	2004년도 예산안 반영여부
1. 도서구입사업의 사고이월에 관한 사항	· 2004년도 도서구입비 예산은 2억 1,267만원으로 2002년 (4억 5,480만원)에 비해서는 줄었으나, 2003년(1억 7,405만원)에 비해서는 증가하였음.
2. 국제회의 관련예산의 부적절한 집행에 관한 사항 (UN 및 APF 관련 국제회의예산으로 일본, 캐나다 등의 인권기관방문 등으로 당초사업을 변경하여 예산집행)	· 2004년도 예산안에는 UN 등 국제인권회의 참석예산이 2억 1,068만원으로서 지난해 예산 (2억 1,063만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3. 간단한 법률검토 사안을 인권위 자체조직과 인력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외부 용역으로 처리	· '인권상황실태조사' 명목으로 연구개발 용역비 (예산과목 212-206-01)가 8억원 계상되어, 지난해 8억4,000만원에 비해서는 0.5%가 감액됨.
4. 인권영화 제작을 위한 소요경비 집행과정에서 예산회계법에서 정하는 전용절차를 미준수	· 인권영화제작사업으로 2004년도 예산안에 5억 7,8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됨.
5. 과태료 미수납에 관한 사항	· 세출예산안과는 해당사항 없음.

2004년도 법제사법위원회소관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법무부소관
법제처소관
감사원소관
헌법재판소소관
대법원소관
국가인권위원회소관
부패방지위원회소관

법제사법위원회